

고규홍의 '나무 생각'



침략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나라꽃, 무궁화

나무의 우거진 잎이 꽃보다 아름답다 해서 옛 사람들은 여름을 녹음방초송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고 했다. 하지만 무궁화는 무성한 여름 나뭇잎의 초록빛을 단박에 이겨낼 만큼 화려한 꽃을 피운다.

나라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나라꽃의 꼽깁한 기준이 없다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보랏빛 꽃송이 한가운데에 자줏빛 무늬, 즉 단심(丹心)이 선명한 꽃을 흔히 나라꽃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무궁화 꽃에는 그밖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이들테면 보랏색 꽃지 없게 하얀 색 무궁화 꽃도 적지 않다. 또 보라색 꽃이라 해도, 꽃송이 한가운데 단심이 있는 꽃도 있고 없는 꽃도 있다. 하얀 색 꽃도 마찬가지로 단심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 꽃잎이 겹꽃인 품종의 무궁화도 있다. 세계적으로 300가지 넘는 품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형태의 꽃을 나라꽃으로 삼아야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아쉽다.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나무다. 대개 개나리처럼 생울타리로

집 주변에 심어 키우며 더불어 살아온, 우리에게 무척 친근한 나무다. 최근 들어 나라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 보존을 비롯한 품종 선별 등의 연구와 실험이 적극 진행 중이라 하지만, 아직은 나라꽃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연구는 모자란 편이다.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지정된 유래는 정확하지 않다.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알려지기 전인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문양으로 이화(梨花)를 이용했다. 이화는 자두나무로 더 많이 부르는 오얏나무를 말한다. 그 뒤, 일제 침략기에 들어서자 왕실의 문양이었던 이화를 대신해 이 땅의 민중은 우리 곁에서 더불어 살아온 무궁화를 자연스레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지배권력층에서 일반적으로 나라꽃을 정해 공포한 거개의 외국 사례와 달리 민중들 안에서 저절로 나라꽃을 지정하게 된 셈이다. 나라꽃 무궁화가 우리에게 더 각별한 이유다.

무궁화는 특히 일제 식민지 침략자들의 지독한 탄압을 거치며 더 옹골차게 우

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식물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은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민족 사이에서 무궁화가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새를 알아챈 일제 침략자들은 온갖 구실을 들먹이며 무궁화를 탄압했다. 바라보기만 해도 눈에서 피가 나온다면 '눈에피꽃', 손에 닿으면 부스럼이 생긴다 해서 '부스럼꽃'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모두 터무니없는 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상정을 일그러뜨려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겠다는 간악한 처사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른바 '오산학교 무궁화동산 사건'에 이르면 침략자들의 무지와 간악함은 극에 이른다. 이송훈 선생이 창립하고 조만식 선생이 교장이던 오산학교에서 1934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오산학교에는 독립 운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무궁화 동산을 조성했다. 이를 알게 된 일제는 무궁화를 없애려고 지시했지만 오산학교는 일제의 요구를 선선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인

들은 오산학교의 무궁화 동산에 불을 질러 무려 8만 그루의 무궁화를 단번에 태워 없앴다. 침략자 일본인들이 우리 땅에서 벌인 천인공노해, 한없이 무지몽매한 만행이다.

그 뒤로도 일본인들의 무궁화 탄압은 이어졌다.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그려 넣는 걸 비롯해,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까지 도안이나 표식에 무궁화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됐다. 신문의 로고도 물론이고, 학교의 상징이나 교표에도 무궁화는 금기였다. 그러나 잔혹하게 이어진 무궁화 탄압은 거꾸로 우리 민족의 무궁화 사랑을 더 간절하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무궁화는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상징이 됐다.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침략자들에 맞서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는 동화의 대상으로 여긴 우리 민족이 이뤄낸 나라꽃 무궁화의 장엄한 승리다. 광복절 즈음에 도도하게 피어있는 무궁화 꽃, 그래서 더 소중한 수밖에 없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최민선 조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아이와 건강한 동행, 그 시작은 모유수유

과해, 해외 138개 국가 평균 38%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아이에게 그 어느 것보다 '완전식품'인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모유수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면역 및 만성질환 예방에 최고라는 것이다. 우선 아기는 모유 수유로 면역 조절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다양한 감염에 노출돼도 각종 유해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다. 엄마 몸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그대로 넘어가 아기의 몸속에 살아남아 항체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초유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면역글로불린과 락토페린이 고농도로 들어있는데 면역글로불린은 균에 대한 항감염작용이 있으며, 락토페린은 세균번식을 막을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켜 신생아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미국소아과학회는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이 분유 수유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며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모유를 최소 4~6개월 이상 수유하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든 수 있다고 한다.

모유수유를 한 아이는 인지발달 점수가 높다. 과거 웨스턴 호주 대학 연구팀이 10살 남녀 아동 1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소아과학회지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6개월간 모유를 수유한 남아가 수학, 읽기, 쓰기, 철자 등에 있어 분유를 수유한 남아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도 2012년까지 6년동안 국내 산모 1700여 명과 그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인지점수가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모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잘되고, 면역글로불린과 락토페린이 풍부해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알레르기 또한 일으키지 않는다. 소화배변기관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아이에게 특히, 모유는 소화가 잘되고 배변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특징이다. 모유는 영양상 이점뿐만 아니라 모유 속에 함유된 특이 미네랄 함량요소와 장내 세균에 대한 유익한 영향을 통해 광범위한 감염 방지, 미숙아에서 괴사 장염 위험의 감소, 영아 급사 증후군 위험의 감소, 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위험의 감소와 신경 발달 결과의 향상 등 이점이 많다.

모유수유의 장점은 비단, 어린 아기에 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기가 젖을 빨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자궁수축을 촉진시켜 산후 출혈을 예방한다. 또한 산육기 신진대사를 돕다 보니 체중감소와 산후회복에 도

움을 주는 장점까지 있다. 배란이 늦게 오게 함으로써 다음 임신을 늦춰 자연스럽게 피임의 효과까지 있다. 또한 모유수유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빈도 역시 감소시킨다. 실제로 15년도 미국국립암연구소(NCI) 의학저널이 발표한 모유수유와 유방암발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에서 모유수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않은 쪽에 비해 유방암 재발 위험이 30% 정도 낮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아이의 건강 때문에 드는 의료비의 지출 및 분유 구입 시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엄마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이는 물론, 엄마에게까지 좋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성공적인 엄마 젖 먹이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기가 태어난 후 되도록 빨리(30분 이내) 젖을 물리며, 갓난아기에게 엄마 젖 외에 다른 음식물을 주지 않는다. 엄마와 아기는 24시간 같은 방을 쓰며, 아기가 원할 때마다 젖을 먹인다. 아기에게 엄마 젖 외에 인공젖꼭지나 노리게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 것 등이다.

기고



권성욱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스웨덴의 복지를 바라보며

로 압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계층 간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포괄적 복지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50~1960년에 최고의 복지수준을 완성했다. '황금의 스웨덴 복지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 분배하고 있다. 그 정책의 핵심은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실제 국가 전체예산의 약 3분의 1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조세부담이 큰 데도 국민의 저항이 적었던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러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복지의 내용을 확대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근거해 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정치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발전적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의 특징은 폭넓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로 압축할 수 있다. 학교나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 복지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을 높은 누진 과세와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해 조달해 분배하고 있다. 그 정책의 핵심은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실제 국가 전체예산의 약 3분의 1이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조세부담이 큰 데도 국민의 저항이 적었던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러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복지의 내용을 확대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근거해 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정치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발전적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해야만 복지가 따라온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추가 근무도 야근도 원만해서는 하지 않는데,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일을 해야만 복지가 주어진다. '고용이 복지가 되는 국가'가 스웨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에 따른 복지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일할 수 있는 고용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달성한 국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는 보육·자녀 양육정책, 일 가정 양립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정책 간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부문에서는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해 모든 시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하고 나머지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매월 소득에 상관없이 117유로를 지급하고 가족 양육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친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각종 건강검진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주먹구구 식인데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매번 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선심성 공약과 제도가 남발되면서 일반인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의 큰 틀과 방향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스웨덴이 복지제도를 정비할 때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점이다. 스웨덴이 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전쟁의 피해를 적게 받았던 때다. 국토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기 산업화를 일궈내면서 자원 마련이 가능했다는 점도 있다.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스웨덴의 복지나 다른 북유럽식 복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출범 100일 문재인 정부 개혁 성과 이야기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오늘로 100일을 맞는다. 촛불민심으로 분출된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 요구 속에 개혁 속도전을 파은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과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통으로 점철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통치 스타일을 선보이며 최소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희생자 유가족을 감싸 안는 장면은 국민의 마음을 깊이 각인시켰다.

세월호 참사와 4대강, 원전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폐지는 엄무지사로 돌렸다. 아울러 검찰과 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잇따라 개혁의 수순대에 올렸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5·18 정신의 한瓣 전문

수족 추진과 5·18 진상규명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역대 보수 정권에서 확대됐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증용됐고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자동차 등 19건의 해묵은 현안들이 국정 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여소아대 구도에서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야당과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여·야·정 삼합협의체 구성은 여태껏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근본적인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적 효과를 노린 성과주의적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증세, 복지, 탈원전 등은 그 대의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 주체들과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혁신일로 '살충제 계란' 파문 조기 수습 총력을

경기 남양주·광주시, 전북 순창 등의 양계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16일 나주 한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적 종합관리와 전수조사 등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살충제 계란' 공포는 확산할 조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 등을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현재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다량 섭취하면 건강·신장 등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피프로닐'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한 '비덴트린'이다.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2곳이다. 비덴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장은 경기도 광주와 양주, 전남, 나주 등의 4곳이다.

주부들은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당장 계란 구매를 삼가고 계란이 들어간 음식마저 피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란의 유통경로는 안전하게 포착된다. 이번 파동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빠른 모레 오후쯤엔 안전한 계란의 전량이 유통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불신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다양한 식품의 필수 재료이자 국민 식품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모든 계란 농장에 대해 살충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이력 추적을 통해 문제가 된 계란을 반드시 수거해 전량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살충제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無等鼓

지긋지긋한 이 여름이 곧 끝나겠지만 두려운 것은 내년 여름이다. 올해보다 더 뜨겁다면 참기 어려울 것 같다. 평소 승용차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여름에는 방법이 없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둘러싸인 이 거리를 걸으면 2~3분만에 온몸이 흥건해지기 때문이다. 올 여름 차를 더 타고 에어컨을 더 틀었으니 배출가스를 더 내뿜었을 것이고,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더할 것은 틀림없다.

사실 자동차만큼 인간에게 이로운 기계는 몇 없다. 정소의 이동을 신속하고 해 주었고, 거리의 장벽을 없애면서 인간의 삶은 윤택해졌다.

광주에 민간인이 타는 차가 등장한 것은 1912년경이다. 일본인 가토 이쿠사부로(加藤幾三郎)가 가토 자동차부라는 회사를 만들어 차 2대로 광주~송정 간을 운행했다고 광주시사 2권은 기록하고 있다. 105년이 지난 2017년 64만2414대의 차가 광주 곳곳을 뒤덮고 있다. 그로 인한 마찰과 사회적 비용도 상상 이상이다.

1997년 '도시르네상스'를 쓴 리처드 로저스는 도시 지속가능성의 성공 여

부는 차에 달려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의 도심 진입을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지자체들이 높은 도심 통행료나 주차료를 받고, 불법 주차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도심 속 차를 규제하면 오가는 사람이 늘어난다.

물론 나무를 심고, 물을 흐르게 하고, 벤치를 설치해 쉬어가게 하고, 작은 광

장을 조성해 모여들게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 광주는 차본(車本)도시가 돼버렸다. 사람이 아니라 차가 도시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도심의 재생과 부흥, 즉 르네상스는 도시의 어디든 사람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한다.

도시재생 뉴딜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광주는 사람과 녹지를 핵심으로 하는 도심 재편 방안을 고민해 오한다. 광주가 인본도시라면 도시공간에서 그것이 구현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055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